제 3 장　산업입지정책

제 1 절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정부의 산업입지정책은 산업의 조화있고 합리적인 입지와 기업이 수요하는 산업용지의 적절한 공급 및 원활한 투자여건의 조성과 아울러 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감으로써,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할 것이다. 즉, 高지가와 입지부족에 따른 고비용 구조의 탈피, 기업의 원활한 투자와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산업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21세기의 고부가가치형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입지 공급과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수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제 2 절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 기업의 지원

1. 산업단지 관리

2003년 12월 현재 35개 국가산업단지[1](202㎢), 157개 지방산업단지(101㎢)를 개발하여 국가산업단지에 18,893개 업체, 지방산업단지에 9,839개 업체가 입주하고, 현재 평균 국가 83.5%, 지방 86.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 전체 생산과 수출에서 산업단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여, 2003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총생산 263조원, 수출 943억불,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생산 84조원에 수출 312억불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이는 우

1)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면적은 분양대상 산업시설구역의 면적임.

리 나라 전체중 생산은 49.0%, 수출은 71.8%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정부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업체 선정요령 등을 정비하는 등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고,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능을 혁신지원기관 위주로 개편하여 산업단지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으며,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산업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변화하는 환경과 각 지역별·단지별 특성 있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입주 기업들이 기업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고 벤처기업 및 영세기업들의 입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KICOX 벤처센터 및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중소기업 임대전용단지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기업간 네트워킹 강화, 산업집적 촉진 등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추진를 위해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입주 기업에 대한 취업알선, 유휴설비거래, 부동산 알선, 산업단지 합리화 자금지원 등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앞으로도 입주 업체들의 원활한 생산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2. 벤처창업 및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아파트형공장의 공급

수도권 과밀억제지역내(종전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내)에서 1979년 1월 1일 이후 공장의 신·증설을 전면 제한함에 따라, '80년대말에는 대도시 지역에 입지가 불가피한 노동집약적이고 영세한 소규모 봉제·완구·섬유·전자부품조립 등과 같은 업종의 공장들이 각종 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무등록 공장으로 남아 열악한 환경에서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형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한정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입지난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립, 경영여건개선, 도시환경정비, 환경오염방지, 도시 유휴 노동력의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은 1989년 준공된 인천 주안아파트형 공장을 시작으로 하여

1993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공급확대가 추진되어 온 바, 2002년 12월말 현재 아파트형 공장 공급 현황은 준공이 154개동에 입주 업체수가 4,794개이며, 86개동이 건설중으로 입주예정 업체수가 5,670개이다.

정부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을 통하여 중소기업 등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총량 규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설치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상 구역을 확대하는 등 각종 입지상의 지원을 해나가고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아파트형 공장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나가면서 집적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 확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지원 수단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제 3 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입지 공급의 확대

점차로 확대되는 국제적 자본이동에 대응하고 부족한 국내 투자 수요의 확충 및 실업해소, 당면한 외환위기 등의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강구되었다.

정부는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의 공장설립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발시키기 위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이전효과가 큰 25개 첨단 업종에 대하여 2003년까지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2002.11월 경남진사, 충북오창, 경북구미에 각각 165천㎡씩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확대 및 신규지정하여 현재는 천안 491천㎡, 평동 958천㎡, 대불 1,614천㎡, 진사 330천㎡, 오창 165천㎡, 구미 165천㎡ 등 총 3,723천㎡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운영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0.1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그 동안 수출가공구로서의 전통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수출자유지역에 물류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와 아울러 국제교역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는 "자

유무역지역"으로 개편하였으며, 2000.10월에는 군산자유무역지역을 신규로 지정하여 2004년말 입주업체 가동을 목표로 조성중이며, 2002.11월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과 대불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을 하여 2003년부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조성 및 개발중인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입주유치에 지자체 및 관련단체 등과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여건과 투자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나갈 계획이다.

제 4 절 농공단지의 활성화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1984년 횡성 묵계농공단지 개발을 시작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2003. 12월 현재, 전국 13개 시·도에 315개 단지 47,369천㎡가 지정되었다. 2001년 이후 경기회복추세 및 정부지원 시책의 효과 등으로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은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 즉, 분양률(97.6%) 및 가동률(91.6%)은 크게 증가하였고, 휴·폐업률(8.4%)은 대폭 감소하였다.

1984년부터 2003년말까지 정부에서는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해 국비보조3,031억원, 지방비보조 5,388억원, 국비융자 2,572억원, 등을 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비에 보조 또는 융자지원하였고, 폐수처리장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 569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2003년까지 7,573개 업체에 18,312억원을 융자지원 하였다.

농공단지는 총 고용인원 110천명중 70.0%인 74천명이 농어촌 현지인이 취업하고 있고, 2003년 한 해 동안 20조원을 생산하고, 37억불을 수출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향후 낙후지역 농공단질르 중심으로 향토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성장·발전의 거점화를 추진하는 등 점진적으로 단계적인 활성화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기초지자체의 자생력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지 활성화를 위해 중점추진과제로서 첫째, 통합지침 등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보완하여 단지조성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지역특화산업단지를 제도도입 취지에 적합토록 향토산업 전문단지로 육성하는 등 낙후지역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셋째, 입주업체 기술·경영지도 강화 및 산·학·연 연계시스템 구축지원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넷째, 관련부처간 정책협의 기능 강화 및 중진공 역할 확대 등으로 업무추진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 5 절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통한 공장설립등의 지원 확대

산자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민·관 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2001.7월～9월) 결과보고서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부족 및 관행 등으로 지자체의 공장설립 민원실의 운영효과가 미흡함을 지적한데 따라 1997년 12월부터 설치하여 운영중인 「공장설립대행센터」(한국산업단지공단내)를 「공장설립지원센터」로 2002년부터 확대·개편하여 전국 10개 도시에서 무료로 공장설립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운영관련 법령 및 실무에 정통한 민간인 전문가 및 공단 소속 임·직원으로 구성된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를 설치하여 공장설립관련 모든 애로를 발굴하여 해결토록 제도화 하였다.

또한, 동법률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공장설립가능지역을 고시토록하고 공장입지기준확인제도를 강화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선투자의 위험성을 감소하였으며, 공장설립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일선 시·군·구 및 산업단지관리기관의 공장설립관련업무에 대한 업무분석과 정보망의 구축을 통한 공장설립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화사업(FEMIS : Factory Establishment Manag ement Information System)을 1999년부터 추진하여 2000년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동 사업의 구축을 완료하였다.

동 정보망이 구축됨에 따라 기업은 신뢰성 있는 실시간 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공장설립승인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공장등록증명서등 제증명의 전국 On-Line발급으로 인한 시간·경비등의 절감 및 시·군·구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업무의 표준화로 인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책담당 부서에서는 전국의 공장설립 현황 및 공장건축면적의 증가추이, 공장의 가동률 및 지역의 생산활동 동향등 실물경제의 통계자료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